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0.18.(일) 11시:00 이후(10.19.(월) 조간) / 배포 : 2026. 10. 16.(금)

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...
불법하도급 단속·체불해소 전방위 확대

- 「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」 경상권 75개 민간현장 집중단속
- 공공현장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·자진신고로 감경제도 운영

□ **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**는 **대한건설기계협회** 등과 함께 구성된 **「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」**을 통해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**10월 19일부터 11월 13일**까지 **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**를 대상으로 **집중단속**을 **실시**한다.

○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「**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**」의 일환으로,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**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**하였다.

○ 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·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하고,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**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**와 함께 **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**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**제1차관**을 **단장**으로 하는 「**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**」을 구성하여 **수도권 건설현장**을 대상으로 **집중점검**한 바 있다.

○ 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**불법하도급 29건** 및 **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**을 **적발**하고, **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25.8백만원**을 **해소**하였다.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**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**하여 **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**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**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**와 **현장 단속**을 **적극 연계**한다.

○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**접수된 신고현장**과 **대금체불 현장**을 이번 **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**하여,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현장 근로자가 **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**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**신고 정보무늬(QR)**와 **대표전화 1577-8221**이 포함된 **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**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.

〈 신고포스터 〉



〈 카드뉴스 〉



□ **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**은 "**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**에서 **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**를 **확인**한 만큼,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**경상권에 집중**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**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**을 **면밀히 살펴보겠다**"고 밝혔다.

○ 아울러 "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**불법하도급 근절**에 나선 데 이어 **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**하고, **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**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**자진시정도 함께 유도**하여 **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**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한동균	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문채빈	(044-201-3541)
			사무관	김종현	(044-201-3572)
			주무관	설수연	(044-201-3511)
			주무관	박수진	(044-201-3508)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성환	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임희엽	(044-201-3542)
			주무관	박민수	(044-201-35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

붙 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포스터



* AI 생성